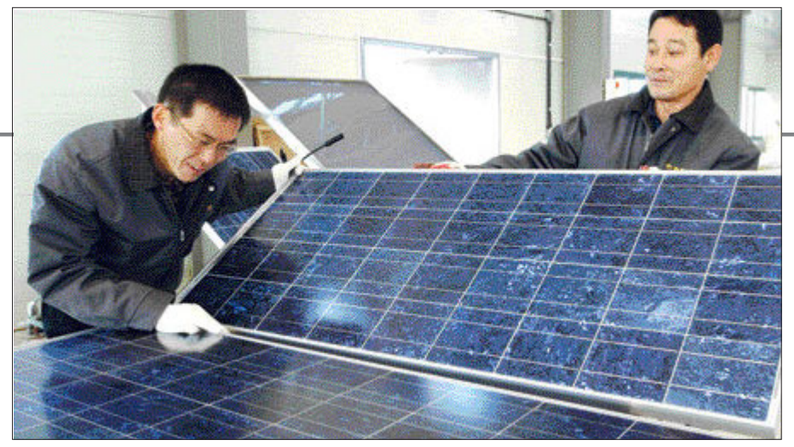
2007 도약하는 향토우수기업

⑤ 한국 에텍

'태양 에너지'로 전국 제패 나선다



한국에텍 직원들이 냉난방 및 급탕용 등에 사용되는 태양열 집열판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충남 당진에 30만kW 태양광발전소 年內 준공
고효율 저가 보급형 보일러시스템 개발 박차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인 한국에텍(HKETECK·광주시 북구 월출동·대표 조애옥·사진·48)의 올해 목표는 전국 무대 제패다.

지난 2001년 회사 설립이후 5년여 동안 태양열 제조 및 설비경험을 축적해온 한국에텍은 광주·전남지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첫 실험대로 지난해 수주한 충남 당진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작업을 성공리에 마쳐야 한다. 수주액 17억6천만원 규모의 이 발전소는 오는 2월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의만 끝나면 곧장 건설에 들어가며, 올 하반기에 준공과 함께 연간 30만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조 대표는 "당진 발전소는 한국에텍이 전국으로 나가는 발판"이라며 "지난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풀가동, 모든 기술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텍의 이같은 힘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2001년 이미 조선대학교의 대체에너지 실증단지 참여업체로 선정된데 이어 이듬해 중기청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1위를 차지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어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용 발전방법''태양집열관의 열매체 보충방법'에 대한 특허출원과 '태양열 집광식 고열집열기''이동식 전천후용 태양열보일러'에 대한 실용신안을 보유했다.

조 대표는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된 '추적형 태양열 원형집열기를 이용한 고효율 보일러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저가보급형 보일러시스템 과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에텍은 지역내 40여개 관련기업 가운데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과 온수기 등에 적용하는 태양열 시스템을 함께 설비할 수 있는 선두업체라는 특장을 지녀 전국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도 2003년 3억원, 2004년 5억1천만원, 2005년 14억7천만원, 2006년 20억원에서 올해 50억여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직원은 6명.

"현재 지구는 산업팽창에 따른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화석연료 고갈, 이산화탄스 대량배출에 따른 기상이변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1대가 보급될 경우 이산화탄스 연간배출량이 5t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조 대표는 "기업이윤 추구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이에 앞서 태양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첨단기술 해외유출 안돼!

국정원 광주지부 보안강좌 개설 운영

국정원광주지부는 오는 2월부터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연수원 교육과정에 '산업·사이버 보안' 강좌를 새로 개설,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 공무원연수원에서는 중견 행정실무 등 8개 교육과정에, 전남도 공무원연수원에서는 투자유치통상과정 등 5개 교육과정에 각각 이 강좌가 개설된다.

광주지부는 첨단 기술 유출방지 업무 외에도 관내 민·관·학 사이 버업무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광주·전남 사이버안전협회'도 발족시켰다. /이종태기자 jtlee@

광주축협 '골드 클린뱅크' 됐어요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이 지난해 농협중앙회 건전성부문 '클린농협' 종합평가에서 '골드 클린뱅크'에 선정됐다.

또 강진 군동농협(조합장 김재원)·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 등이 '실버 클린뱅크'를 차지했다.

클린뱅크는 매년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협 가운데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신규 연체비율 등 자산건전성 부문에서 우수농협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골드 클린뱅크'는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각 1.0% 이하, 신규 연체비율 0.5% 이하, 예대비율 50% 이상인 농협에 주어진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클린농협 선정은 조합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첨단산단 광주경제 핵심 부상

작년 생산실적 32.5%↑·수출 30%↑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광주시 지역경제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현재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생산실적 누계액은 3조47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천998억원)에 비해 32.5% 증가했으며, 수출실적은 23억2천200만달러로 전년 동기(17억8천300만달러) 대비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국가산단의 평균 생산 및 수출증가율 7.8%와 16.1%를 각각 크게 뛰어 넘은 것이다.

첨단산단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입주업체의 생산 및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첨단산단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2단계 광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광(光)관련 연구소와 기업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되면서 전기·전자, 신소재 등 광관련 업종의 창업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중소벤처형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단에 입주한 3대 광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과 ETRI 광통신연구센터, 고등광기술연구소를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광주디자인센터 등이 지역 내 기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기·전자, 정밀기계, 신소재, 환경 등 첨단 제조업종의 318개 업체가 입주해 223개사가 가동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파트 원가공개 합리적 조정 촉구"

주택건설협, 1·11대책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7천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건설협회는 15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실효성 없는 이중규제라며 원가공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원가공개 대상 제외, 실제 토지 매입가 택지비 인정, 건설업체 적정 이윤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1·11대책 관련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격이 인하되는데 원가를 다시 공개하는 것은 기대효과는 전무한 채 주택공급 감소와 민간주택 사업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주택분양원가는 택지비, 인건비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위험회피비용 등 유무형의 가치와 비용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총체적 개념"이라며 산술적 원가파악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규제 약발 몇개월?

정부대책 발표땐 충격 효과는 채 1년 못 넘겨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 이번엔 오래갈까' 정부는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을 1인 1건으로 줄이는 강수를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가계발 금융시장 불안에다 기존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한 몫 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출렁거렸지만 약발이 1년 이상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4년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월 평균 증가액은 1조8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01~2002년 월 평균 증가액 3조2천억원보다 44%가량 줄어든 액수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각종 규제 조치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8·31 대책의 '약발'은 7개월 이상 가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3월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담은 3·30 대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보란 듯이 4~5월 2개월 연속 3조원을 웃돌았다.

급기야 금융감독당국은 작년 6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한도를 제한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9월 부동산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증가액도 2조5천억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11월에는 4년2개월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11·15 대책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하는 1·11 대책까지 잇따라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